

# ‘민식이법’ 5년...스쿨존 아이들 여전히 위험하다

### 신호위반·과속 빈번...광주 송정초 앞 6년간 3만7360건 ‘최다’ 단속 상위 10곳 중 6곳 광산구...남구 백운초 2만8502건 달해 전남, 여수 신평초 2만9214건 ‘1위’·무안 청계초 2만6216건

광주시 광산구 송정초 앞 도로가 광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중 신호위반·과속이 가장 빈번해 어린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17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단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식이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킬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지난 2019년 발의돼 2020년부터 시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을)은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도청별 최다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지점 상위 10개소’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 내 단속 건수는 지난 2019년 이후 6년 동안 스쿨존 내 무인 단속 가중처벌 시간대(오전 8시~오

후 8시)에 적발된 건수를 기준으로 했다.

광주에서는 단속 건수 상위 10곳 중 6곳이 광산구였으며 서구 2곳, 동구 1곳, 남구 1곳, 등이었다.

광산구 송정초 앞 도로에서는 총 3만 7360건이 단속됐으며, 이는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단속 건수다.

전국적으로는 단속 건수 상위 10곳 중 5곳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었으며, 광주시 광산구 송정초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대구 수창초(5만 9854건), 경남 밀양시 상동초(5만 1270건), 대구 효동초(4만 3276건)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송정초(3만 5823건), 남구 백운초(2만 8502건), 광산구 정암초(2만 1280건) 등도 교통법규위반 빈발 지역으로 꼽혔다.

동구 학강초 병설유치원(1만 8527건), 서구 유

촌초(1만 8346건)·양동초(1만 8112건), 광산구 모모유치원(1만 6857건)·대반초(1만 5587건)·정암초(1만 5533건) 등도 상위 10위 내에 들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 3곳, 순천시 3곳, 무안군 2곳, 나주시 1곳, 장흥군 1곳 등이 단속 건수가 많은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여수시 울촌면 신평리 신평초 일대 스쿨존에서는 총 2만 9214건 단속돼 전남에서 가장 많았다.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청계초(2만 6216건), 나주시 송월동 나주초(2만 4474건),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승주초(2만 3642건),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청계북초(2만 1484건)에서도 2만 건 넘는 단속 건수가 기록됐다.

이밖에도 여수시 미평동 미평초 1만 9777건, 장흥군 관산읍 관산남초 1만 8733건,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백초초 1만 8724건, 순천시 동외동 성동초 1만 8640건, 순천시 서면 동산리 동산초 1만 65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단속 다발 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5일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송정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신호위반·과속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최근 6년 동안 광주시에서 가장 많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무인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광주시, 광주교육 발전 ‘맞손’

### ‘교육협력추진단’ 출범...AI·마을교육·기후 등 교육의제 발굴·기획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과 광주시가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지난 4일 광주시청에서 ‘교육협력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협력추진단’은 지난 3월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자치구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을 계기로 체결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이 모태가 됐다.

‘교육협력추진단’은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의 구성

점으로서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함께하는 교육협력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협력추진단은 지자체-민·관·학 교육거버넌스 확장,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발과 운영, 교육융합 지원체계(온마을교육)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세부과제로 AI(인공지능), 문화·예술, 마을교육, 진로·진학, 안전·인권, 기후·환경 등 다양한 교육의제 발굴·기획한다.

시는 지역교육환경 문제 해결, 시정 목표에 따른 교육시책 추진, 거버넌스에 포함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령, 초·중등 교육 종합 조정 등에 적극 나선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광주시와 함께 시정 1층 교육협력추진단 사무실에 주 1회 교육 관련 협의·과제 해결을 진행하고, 온마을교육과 확장 및 교육발전특구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교육협력추진단을 통해 온마을교육과 사업을 촘촘히 운영하고 지자체별 지역교육과정을 광역급으로 확장해 모든 학생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과 광주시가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교통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 인권위 조치 “수용 못해”

### 행정심판 제기

광주시주요교통지원센터(센터)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센터가 관제시스템을 부실 운영하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센터의 상담원이었던 진정인 A씨는 해당 기관이 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의 비밀번호를 일괄적으로 통일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입력한 출발지, 목적지 등이 다른 직원에 의해 수정되고 전산이 조작돼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진정인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부당한 근무평정을 근거로 징계와 해고를 반복하고, 급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광주지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질병관리위원회 등의 개별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광주시청과 이동지원센터에 기관 경고 조치할 것,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수정

력 관리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도록 콜 관제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게 개인정보 책임자와 담당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도 권고했다.

광주시는 센터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특히 정보 수정이력 관리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콜 관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센터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센터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항소심도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항소심 법원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5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부 원고의 장애등급 등에 대한 판단만 바로잡았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가 다른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국가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공자들은 5·18 민주화운

동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이 내지 상이에 따른 장애를 입었다”며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이고 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은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4개소 적발

###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영산강청은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20개소에 대해 ‘오존고농도 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사업장에서 5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산강청 내 환경감시단과 대기환경감시단, 화학안전관리단 등 대기환경 관련 3개 부서 협업으로 추진됐으며 촬영용 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복합가스측정기 등 첨단 과학장비가 사용됐다.

광주시 서구에서 2곳, 영암과 여수에서 각 1곳씩 적발됐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 송풍기 점검부·유입관·상부 캔버스 훼손 방지 등이 주된 적발 내용이다.

영산강청은 위반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탁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